



하늘에서 본 파주

미군기지를 ‘생명’ 과 ‘평화’ 의 공간으로

파주- 미군기지의 그늘을 벗고 희망을 준비하자/ 2006.1

녹색연합등록번호 001-06-01-01





파주 - 군사도시에서 평화의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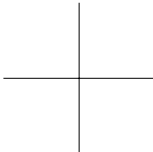
파주는 동북쪽으로는 연천군과 양주군, 남쪽으로는 고양시, 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서북쪽으로는 임진강을 끼고 군사분계선 개풍군과 장단군이 접한다. 예로부터 한반도 중심부 요충지였으며, 고려, 조선조를 통하여 수도 송도와 한양의 중간지점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곡창지대로 유명했다. 파주는 비무장지대로 대표되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자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2005년 파주에서 미군기지는 어떤 의미일까. 인구 27만의 파주는 한국군과 미군 부대가 밀집해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제약과 기지촌 지역이라는 부정적 지역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오랫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2004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안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파주에서도 6개 미군기지 55만8천평이 반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토리 사격장의 시설은 증설되고 있고, 다그마 훈련장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파주는 미군기지 '반환' 과 미군 사격장과 훈련장의 '기능 강화' 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파주가 '미군기지' 라는 군사도시의 그늘을 벗고 '평화' 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이 자료집은 파주에서 미군기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해보았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파주지역 미군기지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정리했으며, 정부 공식 자료와 연구자료 그리고 주민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자료집이 미군 없는 파주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차 례

1. 파주와 미군기지 - 과거	1
2. 파주와 미군기지 - 현재	8
1) 파주지역 반환미군기지 현황	8
2) 파주지역 반환미군기지 쟁점과 과제	11
① 심각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11
② 통합되는 스토리 · 다그마 · 무건리훈련장	13
③ 원칙 없이 진행되는 반환	17
3. 파주와 미군기지 - 파주의 미래를 말하다	23

펴낸이 박영신
펴낸달 2006년 1월
펴낸터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우 136-821)
소리통 02)747-8500
전자우편 greenkorea@greenkorea.org
누리방 www.greenkorea.org
글메김꾼 이유진, 고이지선
감수 이용남

표지사진: 하늘에서 본 파주 ©이용남

본 자료집은 2005년 5.18 기념재단의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파주와 미군기지 - 과거

처음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그곳은 분명 기름진 논밭, 맑은 우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강산이었을 것이다. 머리에 흰 수건 두른 아낙들이 안방 이야길 주고받으며 빨래를 하던, 그리고 밤낮을 모르며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기름진 논밭도 아니고, 삶의 싱그러움이 넘실대는 곳도 아니다.

백만 원이 넘는 국제 전화를 사용하고도 1월 한 푼 내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버렸다고 하소연하는 파주의 캠프하우스 앞 클럽 주인 아들과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클럽 주인, 증축공사 현장을 지나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22,800볼트의 고압선, 고압선을 치위달라는 인부들의 말을 무시한 미군, 결국 고압선에 감전돼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전동록 씨. 폭발물이 설치되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신속히 자신들만 빠져나갔던 파주 캠프 에드워드. 파주에서는 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기지촌, 미군범죄, 환경오염사고가 모두 발생했다.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 훈련장은 농사를 짓는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자연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으면서 재산상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명사고, 기지촌이라는 지역 이미지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도시 파주.

파주와 미군기지에 얽힌 과거를 살펴보기위해 파주지역 미군기지를 찾아갔다.¹⁾

미군에 의한 파주의 흥망성쇠

파주는 전기, 도로, 극장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다. 그래서 일찍이 파주는 대도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나아졌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풍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군 병력이 분산되면서 미군들이 떠나자 이들은 장사 상대를 잃어버렸다.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땅이 없다. 이미 미군에게 다 빼앗긴 뒤였다.



▲ 미군들 사이에 'SEX'라는 표식은 여성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파주 기지촌 주변에서는 아직도 'SEX'라고 쓰인 담벼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아

1) 파주의 과거를 다룬 이 글은 녹색연합이 2002년 전국 미군기지 녹색순례를 통해 파주를 방문해 기록한 내용을 재구성했다.

이들의 치기어린 낙서가 아니다. 이 집에 젊은 여성이 살고 있다는 미군들의 '표식'이었다. 한 때는 미군 신병이 들어오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통과외레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이런 '표식'이 불러온 민간인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60, 70년대에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는 미군 차량을 호의로 생각하고 탔다가 일어난 강간 사건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미군이 남긴 상처, 그 흔적은 이렇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파주지역 미군기지 현황〉

기지명	위치	성격
CAMP HOWZE	조리면 뇌조리 봉일천리	미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 총면적-191,455평
CAMP EDWARD	월롱면 영태리 영태리	82전투지원중대 총면적-76,088평
CAMP GIANT	문산읍 선유리	1/506대대 C중대 총면적-51,778평
CAMP GARRY OWEN	문산읍 선유리	5/17항공대대 총면적-86,264평
CAMP GREAVES	군내면 백연리	1/506대대 총면적-71,613평
CAMP STANTON	광탄면 신산리	5/17수색대대 DEF중대 총면적-81,283평
CAMP BONIFAS	군내면 점원리	JSA 유엔사경비대대 총면적-43,491평
CHARLIE BLOCK	파주읍 파주리 봉서리/봉암리	AFKN중계소
BULLS EYE#2 (다그마훈련장)	적성면 장좌리	미2사단 탱크부대 훈련장 총면적-1,702,584평
BULLS EYE#1	장단면,진동면 군내면	미2사단 훈련장 포병사격훈련장, 스토리사격장, 켄사스 사격장, 오클라호마사격장, 뉴멕시코 텍사스 사격장 등 포함 총면적-25,948,147평

기름에 젖어있는 땅 - 캠프 하우스(미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대)

캠프 하우스는 2000년 8월 28일,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으로 경유 2천 리터가 유출돼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곳이다. 사건 이후 3년이 다되도록 기름 범벅이 된 하천과 땅은 복구되지 않았다. 미군측의 대답은 간단했다. "예산이 없다."

복구비로 150억 원이 들 정도로 오염은 깊이 그리고 넓게 상처를 남겨 놓았다. 캠프 하우스 뒷문으로 이어진 실개천에는 아직까지 기름띠가 남아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하소 연합 곳 없는 이 곳 주민들의 마음처럼 실개천을 감싸고 있는 땅은 기름에 젖어 무지갯빛으

로 반짝거린다.

근처 농경지를 막대기로 휘저었더니 기름 냄새가 어지럽게 번진다. 순박한 주민들은 이 땅에 소를 먹일 풀이라도 길러보겠다고 풀씨를 뿌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확인한 것은 단 한 포기 of 풀도 이 땅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뿐이었다.



▲ 캠프 하우스 뒤편 개울에 기름이 동동 뜬 물이 흐르고 있다.

파주는 특히 농민들과 미군의 마찰이 많았던 곳이다. 2001년 가을 길가에 널어놓은 벼 나락을 미2사단(캠프 하우스) 소속 탱크가 짓밟은 사건

으로 농민들이 미군 탱크의 통행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런 외중에 청년회장 신동국 씨가 강제 연행되자 농민들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미2사단 민사참모 일시 소령은 오늘날 탱크를 보내주면 앞으로 한 달간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 전동록씨 ©이용남

두 팔 두 다리 목숨을 다 잃다 - 故 전동록씨

전동록씨는 2001년 7월 16일 캠프하우스 공병여단 후문 공사현장에서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팔과 다리가 잘렸다. 위험하니 고압선을 치워달라는 몇 차례 요구를 묵살하던 미군은 사고 이후에도 무성의, 무대책 그 자체였다.

전동록씨는 다리를 잘라낸 부분이 피가 돌지 않으면서 점점 굵아 인조혈관을 심기도 했다. 팔다리가 잘려 처음에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한번에 먹고 죽으려고 한 적이 있다. 그 때 아들 전민석 군이 "살아서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금운동으로 7천만 원이 모아졌고 미군은 보상금이라고 60만 원을 제시했다. 전동록씨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에 끝내 사망했다.(2002년 6월6일) 장례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으나 전경에 의해 가로막혔고, 할 수 없이 전씨의 집과 미군 제2사단 앞을 거쳐 벽제 화장터로 향했다.

폭발물 소동에 주민들을 버리다 - 캠프 에드워드(82 전투 지원중대)

캠프 에드워드는 2000년 1월 5일, 폭발물 사건 소동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미군부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 3천 여 명이 5일 새벽 1시30분께 긴급대

피 하는 소동을 벌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군은 군요원과 장비를 모두 철수시킨 뒤에야 이 사실을 한국 당국에 알려준 것이다.

미군은 이 정보를 4일 오전 10시에 전달받고 곧바로 미군장병과 가족, 장비 등을 인근 부대로 옮겼다. 그리고 무려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해당 지역 한국군 사단에 상황을 처음 통보했다.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제보를 받아놓고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내뺀 미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파주 토박이자 사진작가인 '현장사진연구소'의 이용남(50) 소장의 말은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누구를 위한 기지인가, 누구를 위해 이 끝없는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사망 사건에 이어 9월 16일 훈련 중이던 미군의 운반용트레일러에 반혀 한국인 박승주(37)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며 사고를 낸 부대 또한 두 여중생을 희생시킨 미2사단 공병여단 82대대 44공병대 소속이었다.

캠프 에드워드는 2001년 12월 휘발유 유출로 토양오염 사건을, 2002년 3월에 다시 주유시설 바닥 틈으로 1만4800리터의 휘발유가 누출됐음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지붕 날아갈라 - 캠프 스탠튼

주한 미군의 헬기 훈련은 주로 저공비행이다.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는 곳은 꼭 민가 근처이기 일쑤다. 헬기가 바로 집 위에서 낮게 계속 떠 있는 것. 그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고 인삼밭 그늘막이 날아가기 일쑤다. 파주 광탄면 주민들은 이런 일을 연례행사로 치렀다.



▲ 캠프 스탠튼 정문. 기지 내부에 저공비행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헬기들이 보인다.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의 다그마 사격장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의 다그마 사격장 앞에서 훈련을 위해 들어서는 기갑차 굉음은 주민들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답곡리 농로의 좁은 길은 탱크가 얼마나 다녔는지 가장자리는 부서져

가루가 되었고 탱크 바퀴 자국이 무늬를 이룬 아스팔트는 짝짝 갈라져 있었다. 고개 하나를 넘어, 농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탱크는 시간당 10킬로미터 속도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미군 스스로 세워놓은 경고문이 붙어있다. 탱크로 인한 피해가 사람에게뿐 아니라 가축들의 유산, 젖소들의 유방암, 심지어 집단 폐사로까지 이어진다.



▲주민들은 탱크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낮이고 밤이고 탱크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번 지나갈 때마다 집이 '우두우두' 흔들려. 집집마다 벽에 금이 안 간 집이 없고 26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들리는데, 나는 데시벨이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 피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새벽에 탱크가 지나가니 젖을 짜던 소가 놀라 펄쩍 뛰어서 그 집 어른이 젖소 뒷발길질에 얼굴을 맞아서 얼굴이 기형처럼 일그러졌어.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송아지는 자꾸 유산되고 젖도 이전의 반밖에 안 나오고 미군놈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미군 트럭에 아이를 잃다 - 정완수

16년 전에 미군 트럭에 치여 일곱 살 먹은 아들을 잃은 정완수(45)는 미군들만 보면 역장이 무너진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5백 원을 받아 쥐고 집을 나간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정씨에게 미군들은 도로 위의 흰 천을 가리켰다. 천을 들춰본 정완수 씨는 경악했다.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린 아이를 치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에게 하듯 흰 천을 덮어씌워 놓은 것이다.

집집마다 차가 있는 것도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 그때 정씨의 아들은 병원에 닿기 전에 끝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정완수 씨는 광복절에도 대문 밖에 태극기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태극기를 왜 답니까? 우리가 해방된 나랍니까?"

홍수피해를 방조하다? 캠프 자이언트 + 캠프 게리오웬

문산천 하류로 걸어서 20분 거리에는 캠프 자이언트가 주둔해 있다. 96년과 98년에 문산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다. 폭우로 역류한 임진강물이 문산천에서 범람해 문산읍 전체가 물

바다가 된 끔찍한 재해였다. 이 홍수 피해는 문산천 제방만 쌓았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캠프 자이언트가 제방 쌓을 땅을 내놓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똑같은 재난을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

캠프 자이언트가 주둔한 땅은 원래 문산농업고등학교가 있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 학교를 남쪽으로 잠시 옮긴 사이 미군들이 이 땅을 차지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문산농업고등학교가 문산이 아닌 금촌에 있게 된 까닭이다.

2001년 캠프 자이언트와 합의가 이루어져 문산천에 제방을 쌓았다. 더불어 강폭을 넓히고 정비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번엔 캠프 게리오웬이 문제가 되었다. 캠프 게리오웬은 문산천에 접해 있는 8600여 평의 미군기지다. 강폭을 넓히려면 캠프 게리오웬의 진입로인 다리를 다시 놓아야 했는데 미군측은 그들이 직접 다리를 놓겠다고 그 건설비용으로 60억을 요구한 것이다. 그 당시 파주시가 새로 놓은 다리의 건설비용은 10억이 조금 넘는다. 결국 게리오웬 진입로 다리 건설비 48억이 집행되었다.

캠프 게리오웬이 남긴 또 다른 상처는 유류 창고로 쓰였던 곳에 남아 있다. 1964년 2월 17일, 다섯 남매의 가장이었던 한 소년이 기름 한 드럼을 훔치다 미군이 쏜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것이다. 기름 한 드럼을 훔치는 것에 대해 그들이 한 처벌은 목숨을 뺏는 것이었다. 그것을 그저 실수라고만 할 것인가?

스토리사격장 - “그 너른 미국땅 두고 왜 장파리 와서 지랄들이야!”

“우리 파주시 장파리에 스토리 사격장이 생긴 지는 사십 년이 넘었어. 미군들이 훈련하는 곳이라고 민간인을 못 들어가게 하고 농사지으러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주고는 출입영농을 하게 했지. 우리 땅인데도 말이야.”

“탱크하고 장갑차 아직 쓸만한 것들을 들에 드문드문 세워놓고 사격하는데 표적으로 써. 기름이 잔뜩 들어있고, 납도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포를 쏘니 그것이 다 땅으로 흘러 들어가지.”

“그 너른 미국 땅 두고 왜 장파리 와서 지랄들이야 !”

“그리고 그 놈들이 쏘는 탄이 무슨 종류인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말이야. 한 두서너 발을 탱크에다 쏘고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와서는 하루 종일 연구해. 국민들이 못 보는 최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놈들이 뭘 하는 거겠어? 왜 그 너른 미국 땅 두고 이 작은 장파리에 와서 그런 연구를 하느냐 말야. 좋은 거면 여기서 하겠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북에서 온 화천강, 예성강이 만나 서해로 들어간다. 파주시 이십칠만 시민이 이 임진강물을 먹는다. 그러니 이 취수장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것은 당연하다. 아



▲ 탱크를 가로막은 장파리 주민들 / 주민들이 미군들과 겪는 갈등은 한국군이 중재한다. ©이용남

얼마만한 기름이 흘러들어오는지, 어떤 포탄이 얼마만큼 쓰여 어떤 중금속이 물에 녹아들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 사격장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과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미군에게 문제제기도 한 적이 없다.

는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축사를 비롯한 어떤 오염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심각한 문제는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 사격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사격 연습에 쓰인 트럭에서는 흘러나온 기름과 포탄에서 나온 중금속이 날마다 임진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장파리 사람들 - 한국군과 미군사이에서

"우리 마을은 최전방 마을이라 경찰이나 군부대나 다 예민한 곳이라서 우리가 미군들한테 항의하면 우리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막아. 사람으로 서로 못할 짓이야. 마을 사람들도 옛날부터 길이 잘 들어 있어서 웬만한 피해는 참고 말아. 우리가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우리한테 직접 대답해 주지 않고 근처 군부대에다 답을 해 줘. 뭐 대부분은 군사작전이라 말 할 수 없다고 하지. 임진강에 들어가 수영을 못 한 지도 삼십 년이 넘었고 우리 눈에 철조망을 쳐놓고는 못 들어가게 해서 농사 못 지은 지도 꽤 되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주민들과 미군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부대가 미군들과 협의해서 통보하는 형식이야.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협의가 되는 거지. 파주 북부지역 농민들은 농사지으면서 군사시설보호법의 영향을 받아. 당장 농사지으러 가려고 해도 땅이 민통선에 있어서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해. 만약에 우리가 미군하고 마찰을 벌이게 되면 말 그대로 군부대에 찍히는 거지. 당장 영농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농사철 대민지원이 끊겨."

"주민들이 직접 미군과 협상을 벌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제대로 미군에 대한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해."

2. 파주와 미군기지 - 현재

2004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안²⁾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³⁾에 따라 2011년까지 서울, 의정부, 동두천, 파주, 부산 등 14개

시 34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한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파주에서도 6개 미군기지 55만8천평이 반환될 예정이다. 현재 파주에 위치한 미군기지 현황과 LPP에 따른 변화상황을 살펴보자. 2004년 1월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에는 약 2,835만평의 공여지가 지정되어 있다. 2004년 임무전환으로 보니파스와 리버티벨이 폐쇄되었고, 2005년 LPP로 인해 6개 미군기지가 반환 대상이 되었다. 2004년 12월 2일, 미2사단 공병여단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캠프 하우스는 병력과 장비 이동을 마치고 부대 체육관에서 긴스 미2사단장과 도나휴 여단장, 이우형 파주시 부시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기 하기식을 가졌다. 캠프 하우스 부대 이동은 정전 직후인 1954년 이 곳에 주둔한 이후 반세기만이다. 캠프 하우스를 비롯 파주에 주둔 하던 미군 부대는 이미 평택으로 이동하였다. 현재는 미군이 고용한 한국 경비원들만 남아 기지를 경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파주 지역 미군 공여지는 사실상 스토리사격장과 다그마 탱크 훈련장만 남게 되었다.

2005년 파주지역 폐쇄된 반환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조사가 진행되었다.

1) 파주지역 반환미군기지 현황

■ 캠프 하우스(Camp Howze) - LPP반환 대상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4리 일대에 169,000평 규모로 미2사단 공병여단이 사용하였다. 파주시 반환 공여지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서쪽에 봉일천 시가지가 인접해 있다. 1번 국도가 기지 앞을 통과하고 있으며, 북쪽 공릉 저수지에 공릉관광지, 남쪽에는 공릉, 순릉, 영릉(국가지정 사적 제205호)이 위치해 있다.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다.

■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 - LPP반환 대상

파주시 월릉면 영태리, 위전리에 있으며 미2사단 44공병대대 82공병중대가 73,000평 규모로 사용해 왔다. 남쪽에 금촌시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쪽은 1번 국도와 경의선 철도가, 서쪽으로 368호선 지방도와 310호선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 밖 구역으로 국토관리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캠프 자이언트(Camp Giant) - LPP반환 대상

2)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이천리에 미2사단 공병대대가 36,000평 규모로 사용해 왔으며 2004년 말 폐쇄되었다. 캠프 게리오웬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에는 310번 지방도가 동서로 대상지를 관통하며, 서쪽에는 1번 국도와 경의선철도가 지나고 있다. 잡종지와 임야가 전체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문천이 흐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상 문산도시 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에 해당한다.

■ 캠프 게리오웬(Camp Garry Owen) - LPP반환 대상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이천리 일대에 91,000평 규모로, 미2사단 항공여단 7기갑 4대대가 주둔했었다. 북쪽에는 310번 지방도가 동서로 대상지를 관통하며, 서쪽에는 1번 국도와 경의선철도가 지나고 있다. 전체 면적 중 59.6%가 국방부 소유, 40.4%가 타 부처 소유. 도시관리계획상 문산도시 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다.

■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 - LPP반환 대상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 78번지 일대, 미2사단 506보병 1대대가 48,000평 규모로 사용해 왔다. 민통선 안에 위치하며 23번, 1번 국도가 남쪽으로 지나고 있다. JSA에서 약 5km내에 위치하여 주변 대부분이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도시계획상 도시관리 외 1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주변에 판문점, 도라 전망대, 제3땅굴 등과 같은 안보관광지가 있다.

■ 캠프 스탠톤(Camp Stanton) - LPP반환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일대에 기갑부대가 76,000평 규모를 사용해 왔다. 중앙으로 56번 국도가 관통하여 도로를 양쪽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남쪽에는 광탄면 신도시, 동쪽에는 묘지공원이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분수천이 흐르고 있다. 광탄도시계획관리구역 내 위치해 있다.

■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 - 10대 임무전환 반환

군내면 점원리, 민통선 안에 43,000평 규모로 있었으며 JSA 유엔사 경비대대가 사용하였다.

■ 프리덤 브리지(Freedom Bridge) -수시반환

군내면 백연리에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며 17,526평이다.

■ 찰리블락 (Charlie Block) -수시반환

■ 캠프 리버티벨(Camp Liberty bell) - 10대 임무전환 반환

민통선 안 파주시 군내면 초선리, 읍내리에 위치한 20,000평의 미군기지이다.

■ 불스아이 1(Bullseye 1) -LPP반환

파주시 장단면, 진동면, 군내면에 걸쳐 위치하며 캔사스 사격장,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텍사스 줄루, 에모빌 TA-B, 캔사스 LTA, 도하장이 반환될 예정이다. 다그마 사우스라고도 불린다. 스토리 사격장도 불스아이 1에 속한다.

〈국방부, 파주시 자료〉

이름	위치	면적(평)
캔사스사격장	파주시 장단면	86,000
오클라호마	파주시 장단면	18,000
뉴멕시코, 텍사스 줄루/일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243,000
에모빌TA-B 외 6	동파리 일대	1,593,000
캔사스LTA외 6		20,497,000
도하장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9,000
스토리 사격장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하포리	2,149,940

파주 잔류 미군기지

■ 스토리 사격장(Story Range)

진동면 초리, 하포리, 용산리, 서곡리,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일대. 파주시 진동면 운금·용산리 일대 215만평. 기존 피탄지가 80만평에서 213만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불스아이 2(Bullseye 2)

파주시 적성면 장자리 1,700만평 일대. 1973년 미군에 공여되었으며 일명 다그마노스 훈련장(Dagmar)으로 불리는 미2사단 전차훈련장. 1년에 180일간 전차부대의 기동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2) 파주지역 반환미군기지 쟁점과 과제

녹색연합은 파주지역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쟁점으로 첫째, 심각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둘째, 종합훈련장으로 통합되는 스토리사격장 + 다그마 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 셋째, 원칙 없이 진행되는 반환을 꼽았다.

① 심각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2005년에는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하야리아를 비롯해 11개 미군기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파주도 5개 훈련장과 보니 파스, 리버티벨은 2004년 반환예정이었고, 6개 미군기지도 원래 계획이라면 올해 반환되었어야 했다. 반환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복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캠프 하우스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이용남

현재 국방부·환경부는 미군과 공동으로 반환 예정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과 농업기반공사가 용역을 맡았다. 지금까지 최소 15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가 이미 끝났다.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사를 실시한 15개 기지 가운데 용산 헬기

장을 제외한 14개 기지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어 있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했고, BTEX가 14배, 납이 1백2배, 아연·카드뮴·구리가 기준치를 2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또 수질 오염도 심각해서 TPH·벤젠·페놀 등이 먹는 물 기준치의 100배, 테트라클로에틸렌(PCE)이 2.7배, 벤젠의 농도는 39배였다. 이들 물질은 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파주지역 6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수많은 오염사고 때문에 많은 기지를 반환받고 새로운 땅을 공여하는 것에 대해 결국 '현 땅을 받고 새 땅을 준다' 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오염조사 결과는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2005년 상반기에 오염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정화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이 발견된 환경오염 정화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한미가 합의한 정화해야 할 정확한 오염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치유 절차 합의서에 따르면, 치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정확히 어디까

지가 오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현재 한·미 양국이 협상하고 있는 쟁점도 이 부분이다. 2001년 개정된 SOFA에 따라 환경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마련되어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SOFA 본문 규정이 공여국 “환경법을 존중”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미 국방부 훈련(1998.2.2)에서의 해외활동군의 환경치유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국한된다는 주장을 펼쳐 반환되는 부지는 지금까지 미군병사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국 정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분	한국측	미군측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미 국방부 훈련(1998.2.2); 해외활동군의 환경치유
내용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 예) TPH : 500 mg/kg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의 해석과 치유범위는 주둔군 사령관이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의무참모와 환경참모의 조언을 듣고 결심
해석	현재 오염된 상태는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잠재적인 오염원이므로 위험으로 해석	현재까지 미군 병사들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

(참고자료 : 국방부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5.11)

협상을 끄는 동안 올해 반환 예정 기지 열한 곳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와 원상 복구 의무 규정을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 기지 내·외부 환경 실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각 반환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는 철저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한·미 협약에 따르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 허락 없이는 어떤 정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환미군기지에 관한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조사 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이 지하수 등을 통해 외부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기지 외부에 대한 오염 정화에 대해서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이미 언급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보장 뿐 아니라 오염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파주지역에서도 미군기지 6곳이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반환되어야 한

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지환경정화에 대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반환된 후 오염된 땅을 매입자나 소유자가 복원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② 종합훈련장으로 통합되는 스토리사격장 + 다그마 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

경기도 파주의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은 파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임진강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전차들의 도하훈련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 이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가.

▲(단호한 어조로) 아니다.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이 모두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도하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다그마노스(Dagmar North) 말고 다그마사우스(Dagmar South)는 이미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그마노스와 스토리,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보도이후] SOFA환경위 월슨대령 인터뷰 중에서⁴⁾

파주시민들을 비롯 한국인 대다수는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미군 종합훈련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파주 지역 미군 공여지는 사실상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 훈련장만 남게 된다. 문제는 스토리사격장과 다그마 탱크 훈련장이 종합훈련장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훈련 빈도가 잦아진다는데 있다. 스토리 사격장에 대규모 시설이 증설되고, 인근 다그마노스 훈련장, 그리고 한국군 훈련장까지 미군이 훈련할 수 있는 지역이 파주 북부지역에 통합되고 있다. 해병대부터 육군까지, 또 해외에 있는 주한미군까지 다 동원하는 군사 훈련장이다. 직접적인 대북 선제 공격성을 갖는 훈련들을 정치 군사적인 긴장과 위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휴전선 인근에 이렇게 대규모 종합훈련장이 조성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특히 스토리사격장과 다그마 탱크 훈련장은 27만 파주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⁵⁾ 안에 자리잡은데다, 이 지역이 민통선 지역이고, 국제적 '생태계의 보고' 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스토리 사격장 시설 증설 공사 스토리 사격장은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에 위치해있다. 미군은 오는 2006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진동면 초리와 서곡·용 산리 등에 걸쳐 있는 '스토리 사격장' 내 15만2천여 평에 전차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

4) [세계일보 2004-12-05]

5)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시키고 있다.

탄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연습장, 그리고 도시기습코스 훈련장, 사무실, 망대 이렇게 10여 개의 새로운 군사훈련시설을 짓고, 부지 둘레에 총 연장 11.5Km에 해당하는 펜스(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스토리 사격장 215만평 중 80여 만 평 정도가 착탄지역(Impact Area)이고, 미군은 착탄지역에 포를 쏘거나 기총 사격을 하는 형태의 훈련을 해왔다. 이제 그 곳에 대전차 훈련장, 기총 사격장, 막사, 교육실 등 10여개의 시설이 들어서면, 훈련장이 부대와 같은 형태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스토리 사격장 ©이용남

미군의 스토리 사격장 시설증설공사는 200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미군은 2000년 10월 스토리사격장 둘레 10.7km에 높이 2.4m의 철조망식 보안울타리 설치작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커녕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예치, 산림청·파주시와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미군이 훼손한 산림은 2만5000평에 달한다. 미군들이 공사를 하면서 추수철 농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스토리사격장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스토리 사격장이 본래 주한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된 것은 1973년 4월 소파규정에 의해서이다. 민통선 안쪽에 있고,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곳에서 농사를 짓다 갑자기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미군측은 농민들을 스토리 사격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곳이 준위험 지역이고, 총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위험하다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해서 농민들을 내쫓는다면 기존 훈련장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준위험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짓고 있다. 결국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을 나가라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⁶⁾

스토리 사격장 시설 증설 공사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됐다가 2004년 1월 다시 재개되었다. 파주시는 2004년 1월 3일과 5일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시설본부가 파주시에 최종 회신한 공문에

6) 스토리사격장 안에 있는 농경지는 대부분이 개인 땅으로 미군이 73년 한국 정부로부터 공여 받아 사용해왔다. 96년 진동면민회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살게 해달라는 민원을 올린다. 97년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으로 민통선의 변경이 국방부장관에게 넘어왔으나 국방부의 답변은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주민들의 정착촌 신청지역은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미군에 증여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는 미군과 협의해야 할 지역이며, 영농활동도 주한미군전용훈련장 침해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파주시는 진동면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1973년 한미행정협정 시 지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공여되었고, 1997년부터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 개인토지가 공여된 사실을 알 정도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SOFA 규정에 미군 측이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환경조사 관련 정보를 한국의 행정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지방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갖지 않는다' 며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했다. 결국 미군은 달랑 한 장짜리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스토리 사격장은 현재 대전차·기관총·폭파·M203유탄발사기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군은 폐전차 등 차량 수백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어 훈련시 유류·엔진오일·배터리 전해용액·납·부동액 등 중금속이 1년 내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격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격장 건너편에 위치한 금파취수장으로 바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중금속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스토리사격장에는 '웅덩이의 물은 중금속을 침전시키는 정화 시설이니 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있다. 미군측은 이 웅덩이를 '중금속 침전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비만 오면 범람해 정화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파주시는 금파 취수장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격장과 훈련장의 오염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하천수는 군사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수질검사항목(56개)만 검사할 뿐 훈련장 주변 화학물질을 검사하는 기준도 없어 별도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미군이 주장하는 스토리 사격장 내 정화시설 ©이용남

파주시는 금파 취수장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격장과 훈련장의 오염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하천수는 군사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수질검사항목(56개)만 검사할 뿐 훈련장 주변 화학물질을 검사하는 기준도 없어 별도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주스토리사격장 내 문화재훼손문제도 심각하다. 시민단체인 문화유산연대와 파주환경녹색모임은 2004년 12월 22일 "스토리 사격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미8군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스토리 사격장 부지에는 신라 경순왕의 직계후손묘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며 "미군은 공사를 하기 전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된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자리잡은 다그마노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임진강가에 펼쳐진 광활한 175만평의 땅이 바로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이다. 1973년 미군에 공여된 이 훈련장에

서는 1년에 180일간 전차부대의 기동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1992년 이 훈련장에서 2km가량 남쪽에 위치한 금파취수장을 확장 준공하면서 임진강변 장좌·장파·금파리 일대 4,842km²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다그마노스 훈련장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 전차훈련장에서 수시로 전차와 장갑차, 기갑차량 등이 동원되는 도하(渡河) 훈련이 이뤄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미군 측에서 훈련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훈련장은 또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묶여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2005년 6월 국방부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의 '다그마노스 미 훈련장' 내 사유지 매입 추진 작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미군훈련장의 훼손 설치와 진입로 개설을 대비한 것으로 이는 결국 훈련확대로 이어지고 지역을 고사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군 1군단 훈련장에서 주한미군 훈련 -무건리 국방부는 1980년 법원읍 직천리 일대 120만평을 수용하고 1981년에는 오현리지역 3만 여 평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등 지난 20여 년 간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장계획' 을 추진해왔다. 이 훈련장은 오는 2007년까지 토지매수를 마무리하고 1만 여 평의 종합훈련장을 추진할 계획인데 미군이 연 13주 이용하는 한미공동훈련장으로 사용된다. 한미공동훈련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에 의해 합의된 항목으로 군사훈련장에 대한 책임은 한국군에서 지고 미군은 훈련에만 몰두하게 되어 미군은 환경파괴, 문화유산 훼손 등의 책임에서 한결 자유로워지게 된다.

"어느 날인가부터 미군들이 훈련을 나왔어요. 예전에 동두천 지역의 일부 훈련장이 없어진다 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여기로 미군 훈련을 많이 나옵니다. 전차 훈련 이 많죠. 그리고 보병 훈련도 많은데 기계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전차훈련 포병 훈련 이런 것 들이 많아요.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옵니다. 원래는 한국군 훈련장이었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훈련을 같이 한다는 거죠." - 오현리 주민 심현덕.

파주 법원읍 오현리 일대도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이 일대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사격훈련과 미군헬기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국방부가 확장을 추진하는 무건리 훈련장 오현리 지역은 주민 밀집주거지역으로 훈련장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군사훈련 중 관통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③ 원칙 없이 진행되는 반환

국방부 매각방침 2005년 3월 17일,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도 경쟁 입찰 매각 계획 재산목록'을 공개하였다. 재정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 이 안은 한국군이 사용 하던 기지와 반환될 미군 공여지를 포함해 총 910건이 수록되어 있다. 국방시설본부 관재2과 에서 관리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105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파주는 캠프 그리브스를 제외하고 모든 반환 예정지가, 의정부는 캠프 홀링워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미군 기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난 50년간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매각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미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극심하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로 인해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었을 뿐 만 아니라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범죄에 노출되어왔다. 그래서 시민들은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무상양여 받아 도심 공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되기 전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환경오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오염이 발견된 경우, 오염정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5년 반환 예정된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2005년도 경쟁 입찰 매각계획에 파주, 의정부 등의 미군 기지를 포함시킨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해당 지자체와 논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

전국에 걸쳐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임의대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미군기지를 매각하게 되면 또다 시 미군기지반환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지자체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줄 뿐이다. 국방부는 이미 2003년도에 아리랑 택시부지를 548억원, 2004년도에는 오산 베타사우스를 50억원을 받고 각각 용산구청과 평택시에 매각한 바 있다. 주민 의견수렴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매각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경쟁 입찰 매각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아직 돌려받지도 않은 미군기지를 발 빠르게 매각계획 목록에 올린 것은 이렇게 사전조치를 해야 기지를 반환받았을 경우 바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5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는 국방부 매각계획 공고에 파주지역 반환미군기지 부지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국방부가 매각계획 공고한 캠프 하우스 3개 필지는 대학 등 시의 기지활용 계획에 포함돼 있는 땅인 만큼 최종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환 앞둔 파주 미군기지도 주거지 용도변경 요구⁷⁾

국방부가 한·미간의 협약에 따라 파주시에 반환기로 한 4개 미군기지에 대해 지난해 2차례 걸쳐 주거지용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공여지 반환을 앞두고 ‘땅값 올리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11일 국방부가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 걸쳐 반환예정인 파주지역 4개 미군기지 터의 용도를 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땅값이 2~3배 가량 뛴 것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예상이다.

국방부는 캠프 하우스(63만여㎡)의 경우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자연 생산녹지인 게리오웬(28만여㎡)은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인 자이언트(17만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와 농림지역인 스탠튼(26만여㎡)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마련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해당 기지 터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쪽에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용도를 바꿔 줄 경우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토지매수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해당 미군기지 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라며, 국방부쪽의 용도변경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환 부지 활용 ‘마스터 플랜’ 세운 파주시 파주시는 2004년 2월, 6개 반환미군기지, 52만평에 대한 활용 마스터플랜인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파주시가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국회에서 비준되면서부터이다. 2004년 1월 작성된 ‘파주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 보고서’에서 주민들은 기지 땅을 교육·의료·문화시설 같은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파주시가 세운 계획에 의하면 계획에 따르면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캠프 하우스(18만평)는 대학과 벤처육성시설이 유치돼 산학연 단지로 활용되고 캠프 에드워드(월릉면 영태리, 7만5000평)는 행정·업무단지를 조성한다. 캠프 자이언트(5만1000평)는 주거 및 상업시설 △캠프 게리오웬(8만6000평)은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 △캠프 그리브스(7만1000평)는 전쟁사박물관 등 테마공원 △캠프 스탠튼(8만2000평)은 무역 유통 및 산업집적배후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파주시 측은 기지 땅의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7) [한겨레 2004-02-11 21:15] 국방부 땅값 올리기 속내 ‘눈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의 개발참여를 유도하는 민자유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공공사업'에 한정돼 택지나 골프장, 대학 등을 설립할 때도 지원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원소유주들에 대한 입장도 마련되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 미군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는 올해 4월 13일 스토리사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땅을 팔아 5조5천여억원의 천문학적(평택)이전 비용을 조달한다는 발상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군부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반환 미군기지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돼 공익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스토리사격장 등 나머지 미군 훈련장도 조속히 반환하고, 미군 기지를 옮기기 전에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 북부지역 피해 배상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되는 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계획만 수립해서는 안된다. 반환 공여지를 포함 파주 도시 전체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캠프 그리브스 어떻게 활용할까? 경기도는 경기도 파주시 미군 캠프 그리브스 7만1천600여평을 활용, 국내외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양시설과 통일 및 생태체험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04년 말 제출한 '반환 공여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 내 숙소와 영화관 등 미군 건물들과 훈련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인근 통일촌 시설을 활용해 휴양 및 체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국방부의 계획이 다르다. 국방부는 한국군을 주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과연 지역발전의 축복인가?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의 배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하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반환 미군공여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역발전 촉진과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과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것이다. 특별법 논의 배경에는 지난 5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희생을 감수한 지역에 대한 보상과 미군기지 폐쇄로 인한 경제악화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미군기지가 지역경제를 지탱해왔기 때문에 기지 폐쇄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면서도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국방부의 매각입장과 지자체의 무상양여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파주 이재창 의원, 의정부 문희상 의원, 부산 김병호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3개 의

원안은 반환미군기지의 지자체 무상양여와 개발지원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국방부와 지자체의 대립은 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사활을 건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방부는 무상양여를 포함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매각방침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반면, 지자체들은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무상으로 기지를 양여 받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지역 사회 전체가 힘을 쏟았다.⁸⁾

(2) 특별법 주요 내용

처음 발의된 3개 법안은 발의 주체와 정당은 다르지만 모두 반환 기지의 무상양여와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이 그동안 겪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법안들은 하나같이 과도한 개발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연 그것이 미군기지 공간의 올바른 사용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하여도, 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본격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예외규정, 많은 개발내용과 행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심각한 “계획적 난개발”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⁹⁾ 행정자치부는 2005년 6월, 관계부처회의(국무총리실, 재경, 교육, 국방, 환경, 기획예산처, 행자부, 경기도 참석)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하였다.¹⁰⁾ 주요 내용 중 국방부 매각과 지자체 무상양여 사이에서 정부는 결국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의된 법안은 2005년 8월 26일 공청회를 거치고, 상임위원회인 국회행정자치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친 후 12월 현재 본 의회 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3개 법안의 통합 법안은 국방부가 반환 등 처분 전에 환경오염과 지하 매설물 등을 처리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없애도록 하였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한 사업 시행인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무상양여를 주장하는 지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의미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을 통해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3)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각 지자체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되면서 공여지 개발 계획을 구상해 왔다. 파주는 발빠

8) 조명래, 미군기지 반환지역 지원 3대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2005. 6

9) 조명래, 미군기지 반환지역 지원 3대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2005. 6

10)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지원 관련 특별법'검토의견, 2005.6,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르게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 (2004)을 세웠으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 결정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춘천(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활용방안 조사연구, 국토연구원, 2005), 동두천(미군부대 이전예정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안 수립, 대한주택공사, 대한민국 토도시계획학회, 2005), 경기도(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5), 의정부도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미군기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부산, 춘천, 경기 북부 등 지자체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비록 무상양여는 아니지만,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통해서 지자체가 원하던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방부 마음대로 매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자체가 매입하는 경우에도 재정 부담이 다소 덜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마련이 숙제로 남아 있다. 지자체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결국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개발사업 주체에게만 돌아가고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의원발의안과 통합 법안 비교표〉

	의원발의 법안	정부의견	통합법안(본 의회 통과전)
반환 공여지의 무상양여와 매입경비 지원	- 반환 공여구역의 국유지를 무상양여,사용허가 또는 매입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문희상 안 제14조,김병호 안 제9조)	-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자체가 반환 공여지를 매입할 경우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대체	- 중앙 정부에서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
사업비 지원	-국가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보조율 인상지원 - 국가는 시장·군수가 교부 신청하는 경비를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문희상 안 제23조,33조,이재창 안제10조, 김병호 안제15조)	- 당해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교부세 등의 증액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특별교부세는 재원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곤란	-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추진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문희상 안제27조, 이재창안 제28조)	- SOFA 환경규정(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는 공여구역을 공여하기 이전이나 반환반기 이전에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여주변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도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p>록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조항신설의 실효성이 적다고 봄</p>	
<p>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조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환경개선부담·원인자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GB 훼손부담금 감면 - 지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 이전자에게 조세 감면(문희상 안 제34조, 이재창 안 제18조, 김병호 안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조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수용 가능하나 나머지 부담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 곤란 -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시 생태계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오염의 직접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설치 확충 재원으로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 - 조세감면은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 추후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 조세감면 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과 지원도시사업개발 계획에 관련되어 공여주변지역 및 반환 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주변지역 및 반환 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조세를 감면
<p>공여구역 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 또는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발전위원회를 설치 -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등 30인 이내로 구성(문희상 안 제 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하고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주변지역, 반환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공여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둔다.

3. 파주와 미군기지 - 파주의 미래를 말하다

시민들이 꿈꾸는 파주의 미래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선 파주시는 파주를 남북교류협력의 거점, 통일거점 도시, 우수한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¹¹⁾ 그러나 민통선 내와 파주 북부에 위치한 대규모 미군 훈련장

11) 파주시는 2000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접경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자족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남북교류협력의 거점, 통일 거점, 자연 생태계 보전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스토리 사격장에서 불과 몇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의선이 연결되고 있고, 파주시나 경기도에서는 DMZ일대를 평화 벨트로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군사 분계선 근처에 이런 대규모 사격장이 조성되고 그 곳에서 훈련이 이뤄진다면 이런 남북간의 관계 개선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의 그늘을 벗어난 파주의 미래에 대해 파주시민, 파주시 그리고 각계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파주에서 미군기지의 그늘을 벗고 희망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판단은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의 몫이다.

① “미군들의 국제훈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토리사격장 증설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한 미군만의 훈련장이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까지 와서 훈련하는 국제 훈련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파리 주민 우경복씨

“작년엔가... 대로를 막아서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300m만 가면 눈이 있으니까 비키라고 2~3시간씩 실랑이를 했죠. 그러면서 애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끼나와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죠. 마크

가 달라. 우리가 못 보던 마크야. 오끼나와에서 오고, 괌에서 오고, 하와이에서 오고...”

“스토리 사격장이 미군들의 국제 훈련장이 되어서는 안돼. 너무 위험해. 남방한계선이 1km밖에 안떨어져 있어”

국방부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의 '다그마노스 미 훈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²⁾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확립과 남북 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교류공간의 조성으로 21세기 파주 미래상제시를 위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완성(2000. 3. 28)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통일한국 거점도시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조성
- 첨단정보 산업도시 :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통일동산, 첨단산업과 대학유치
- 자연환경 생태도시 : DMZ 생태지역 보존 및 안보관광지 조성
- 미래인본 전원도시 :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전원도시 건설

“외지 사람들은 다 팔고 동네 사람들만 남았다. 국방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미군훈련장의 헬스 설치와 진입로 개설을 대비한 것으로 이는 결국 훈련 확대로 이어지고 지역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37번 국도 개통과 함께 테마마을 조성 등 지역 경제기반 마련에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외지사람들이 장파리에 안들어온다. 말 그대로 장파리는 고립되는 것이다. 미군이 밤낮으로 탱크로 훈련하는 동네에 사람들이 뭐하러 놀러 오겠는가. 국방부가 훈련장 내 사유지를 사는 건 결국 이곳을 미군훈련장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거다.”

② “기지활용방안을 성급하게 마련해서는 안된다. 총체적 진단을 통해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준비해야 한다”



현장사진연구소 소장 이용남

파주지역에 대한 사진을 오랫동안 애정을 담아 기록하는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을 세운다. 벤처도시를 짓는다. 공원을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우는 것 보다 어떻게 반환 받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환경오염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정화한 상태에서 반환받을 것인가? 어떻게 무상반환 받을 것인가? 시민들은 반환미군기지라는 공간에 어떤 가치를 심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만들까 보다 ‘어떻게’ 반환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있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까?

“개발논리를 전제로 한 활용방안은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반환미군기지를 두고 기지주변에 사는 사람과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 개발을 전제로 하면 주민과 주민의 싸움이 된다. 기지주변사람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요구하고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을 원한다. 결국 갈등 속에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개발의 이익은 제 3자가 얻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기지활용방안을 급하게 마련해서는 안된다. 총체적 진단을 통해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12) 국방부는 다그마노스 훈련장의 사전 점유된 사유지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매입을 추진한다며 김모씨 등 토지소유주 22명에게 손실보상계획을 통보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람기간을 가졌었다.

진행되어야 한다. 휴지기간을 갖고 긴안목에서 계획을 세우자.”

“반환미군기지는 공짜로 생긴 그런 땅이 아니다. 파주라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참가해 도시계획을 세우자. 시민들이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동안 금촌, 교하 일대에서는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신도시 조성계획도 발표됐지만 모두 임진강 이남인 파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접경지역은 좀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변화가 이끌어내면서, 파주 전체의 발전방향과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 속에서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파주는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한국군부대로 인해 도시의 기형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중앙에 한국군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와 한국 군부대의 반환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환경오염치유문제, 활용방안 등이 국방부,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 등과 본격적으로 수립됩니다”

(파주시장 유화선)

서면질의서

유화선 파주시장님께

서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주시에서는 2004년 주한미군 임무전환으로 캠프 보니파스와 리버티벨이, 2005년 개정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6개 미군기지와 4천여 평의 미군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파주시의 미래에 있어서 반환 미군기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 파주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에서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파주시의 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반환 대상 6개 기지는 폐쇄되어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한 결과 6개기지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환경오염을 완전히 정화한 상태에서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부분에 대해 환경부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 반환미군기지의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를 파주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기지 활용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환미군기지 매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파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파주시가 매입한 미군기지 부지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때 오염정화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녹색연합은 반환미군기지 활용의 기본원칙으로 철저한 환경오염 복원, 시민의견 수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관한 파주시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특히 앞으로 반환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세우는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입니까?

4. 파주시에서는 2003년 3월 국토연구원과 안양대학교 두 기관 공동으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연구를 실시 지난 200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은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앞으로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 특별법안 내용이 파주시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녹색연합 서면 인터뷰 신청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 답변입니다 -

귀 연합에서 서면 인터뷰 요청하신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파주시의 정책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등 6개 기지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군철수가 완료된 상태이며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미군공여지는 2005년도 반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정부에서도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하여 주둔지역의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을 지난 2005년 12월 1일 국회 행사위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어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다. 동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환경오염 치유문제, 활용방안 등이 국방부,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 등과 본격적으로 수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06년 1월 2일, 유화선 파주시장은 파주시여성회관 개강식에서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관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2006년은 파주가 개벽을 하는 해로 선포하고 3대 과제중의 하나로 반환미군공여지 활용을 꼽았다. 현재 27만인 파주 인구가 100만명 규모로 성장한다는 것을 대비해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렇다면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파주시민 여론 조사 결과 -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공공용도 압도적 희망

2004년 1월 국토연구원은 반환될 6개 미군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는 파주시가 국토연구원과 안양대학교에 공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었고 파주시민회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주민설문의식 조사를 의뢰 받아 작성한 것이다.¹³⁾

조리음, 율령면 등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주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미군기지 활용방안 설문조사에서는 공공용도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총 응답건수(1,539건. 중복응답) 중 가장 많은 53.6%(825건), 주거용도가 15.1%(232건), 자연 상태로 원형보존 12.9%(199건) 상업용도 5.7%(87건) 한국군부대로 재사용 3.5%(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용도 중에서는 교육시설(전문대학, 대학교 등)에 37.9%, 의료시설 22.8% 희망해 교육과 의료시설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3)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500명중 남자가 48.4%(242명) 여자가 51.6%(258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4.4%(12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3.6%(118명), 20대 15.4%(77명) 순이었다. 학력은 응답자 490명 중 고졸이 50.2%(246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문대졸 8.4%(41명) 대졸이상 20.4%(100명), 중졸 14.1%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응답자 498명)는 기혼 76.5%(381명), 미혼 21.4%(107명), 사별 1.8%(9명)순이었다.

현 지역 거주기간은 평균 19.46년이었고 응답자(496명) 중 5년 이하가 29.2%(14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22%(109명)이고 21년 이상 30년 이하 18.8%(93명), 31년 이상 40년 이하 10.5%(52명), 6년 이상 10년 이하 8.7%(43명), 41년 이상 50년 이하 6.7%(33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응답자(497명) 중 자영업이 24.7%(123명)로 가장 많고 가정주부 등 기타 21.7%(108명), 농업 10.9%(54명), 대학생 9.3%(46명), 사무직 7.6%(38명), 서비스직 3.8%(19명) 생산직과 공무원이 각각 3.4%(17명)였고, 무직도 11.9%(59명)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계획			
기지	주민 요구	전문기관 제안	반환연도
캠프 하우스	교육시설 의료시설	대학 및 벤처육성시설	2006
캠프 에드워드	교육시설 관공서	행정타운	2007
캠프 자이언트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2011
캠프 게리오웬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	2008
캠프 그리브스	테마공원 전시시설	전쟁사박물관 등 테마공원	2011
캠프 스탠턴	교육시설 의료시설	무역 유통시설 및 첨단 산업단지	2007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와 주민의 개발욕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주시가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활용계획안은 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활용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파주시가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파주시의 발전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연구용역에 파주시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⑤ 언론 인터뷰 속의 파주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

파주반환미군기지의 활용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파주의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파주시민들은 접경지역 분단현장에서 날카로운 대립의 과거를 넘어 평화의 전도사로 거듭나기 위한 힘겨운 자기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도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다. 특히 파주의 경우 반환예정인 6개 미군기지 중 4곳이 화해 교류의 중심축인 통일로 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를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발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 반환 미군기지의 평화적 활용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에서 전쟁의 흔적과 역사가 담긴군사시설을 평화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파주시민회 사무국장 이재석) 14)

“파주시는 2003년 초부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2004년 1월에 80쪽 분량의 ‘파주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 보고서’ 를 냈다. 기지 땅을 교육·의료·문화시

14) 지역포럼/반환 미군기지를 평화의 장소로... [동아일보 2002-12-09 18:35] 2002년 10월에 LPP 발효이후, 2006년도 반환예정인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하우스에는 의정부 교도소가 이전해온다는 발표가 있을 후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

설 같은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파주시 도시계획과장 정원모)¹⁵⁾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지시만 기다리지 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부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확정된 뒤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반환미군기지의 면적이 넓은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 뿐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접근을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반환미군기지의 정확한 면적, 공여지의 원소유와 관련된 정보들이 공유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특별법 발의 이재창의원)¹⁶⁾

“용주골, 성교육장으로 개발해야” “파주시에는 1950년대부터 미군 주둔으로 용주골(파주읍 연풍리)이 생겨났는데,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정부의 강력한 폐쇄 방침과 맞물려 새로운 지역 재생의 아이디어가 절실한 시점이 됐다. “이에 따라 용주골 일대 3만3천여평에 종합 성교육장인 젠더파크를 조성해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산업 지원 및 배후 주거단지도 개발해야 한다.” 젠더파크에는 성매매 역사 및 체험관, 성 인지력 테스트 및 게임관, 젠더 패밀리관, 영상관, 캠프장, 세미나실 등을 갖춰 학교나 기업, 가족 단위의 캠프와 여성폭력 교정 치료 캠프 등으로 활용하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윤배)¹⁷⁾

“미군기지 공여지는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발전의 중요한 가늠쇠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군기지 공여지 활용계획 수립 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철학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기북부지역의 전체 지역공간구조의 틀을 고려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15) 인터뷰 내용 - [반환 미군기지 청사진이 없다](2-)기지 반환도시 가보니 [세계일보 2005-04-12 19:39]

16) 반환 미군기지 청사진이 없다(2-)반환기지 특별법안 놓고 첨예 대립 [세계일보 2005-04-11 21:00]

17)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연합뉴스 2005-10-14 14:20] 2005년 10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파주시 발전방안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역공동체 심포지엄'에서 장윤배 연구원은 "태생적 원인이었던 미군의 철수로 성매매 집결지 일명 용주골에 대한 장래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수립한 상태에서 점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미군기지 주변지역 재정비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도입이 필요하다. 미군기지가 있는 도시마다 미군기지 중 하나를 평화와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상징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징성있는 도시공간, 도시건축을 도입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얼굴로 부각시켜야 한다. 넷째, 미군기지 활용계획에 시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의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미군기지가 가지고 있던 특수성으로 인해 미군기지 활용계획은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의회, 시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에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간다면 지역민의 지역사랑이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주영 (경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¹⁸⁾

18) 2005년 10월 19일 경인일보

파주반환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녹색연합의 제안

1. 반환될 기지의 '토지상태' 양호한가?

파주시민 여러분, 오염된 미군기지는 반드시 철저한 환경정화를 마무리 한 후 반환받아야 합니다. 오염된 땅을 반환받게 되면 그 땅을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가치보다 오염정화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환받게 될 미군기지의 환경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지자체가 공여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국방부가 매각입장을 고수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계획은 '물거품' 이 됩니다. 국방부가 임의 매각할 경우 민간업자에 넘어가 난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가 공여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땅을 공공의 용도로 파주시민 모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반환 받는 땅에 대해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내세울 경우 결국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자체의 개발 공약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막아낼 수 있는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3.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파주의 미래를 그리는 일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한반도에서 파주라는 도시가 갖는 비전과 파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파주의 미래 도시 기본계획에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이 녹아나야 합니다.

4. 평화도시에 미군 종합 훈련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 이런 대규모 사격장이 조성되고 그 곳에서 훈련이 이뤄진다면 남북간의 관계 개선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의 도시를 지향하는 파주에서 미군의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주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도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노스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5. 파주 시민들의 참여로 여는 파주의 미래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토론이 활성화 되어서 파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설정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 - 시민 선언문



지난 60년 동안 미군기지는 각종 오염사고와 훈련 등으로 이 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왔다. 도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도로가 구부러지는 등 기형으로 도시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미군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만들었다.

이제 미군기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환된 미군기지는 폭력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당겨, 미군기지의 그늘을 벗어나 생명의 공간을 준비하자!

미군기지로 발생하는 모든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온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기지가 들어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남북 화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더 이상 미군기지와 기지 확장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미군기지로 발생한 환경오염을 치유하며, 왜곡된 지역경제를 바로 잡는 등 지역 주민과 지역의 생태계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치유해 나갈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군사 기지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군사 무기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안보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러받는 미군기지는 공공의 공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

반환 미군기지는 역사, 평화의 공간이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반환 기지를 매각해 버린다면 대다수 시민 편의나 삶의 질보다는 수익 창출에 치우쳐질 것이다. 따라서 미군기지를 당장 개발하기보다 공간을 남겨두고 미래세대가 미군기지를 둘러싼 우리의 역사와 평화를 이해하고 교육받으며,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미군기지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둘러받은 미군기지는 더 이상 국가의 것,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 의사 결정에 시민 참여, 시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때 시민 스스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푸른 별 지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백두대간 보전활동/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야생동물 보호활동/
만원으로 녹색아시아를 일구어 가는 '녹색아시아를 위한 만원제'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펼칩니다.

단순 소박한 삶의 길잡이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 발간/한국의 환경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간 '한국 환경 보고서' 발간/ 섬환경캠프, 그린맵 대장정 등 교육 문화사업/어린이자연학교, 청년생태학교, 바다학교 등의 정기교육/시민들과 함께 하는 나눔녹색교실 등 열린 강좌/ 산수유반, 들꽃반으로 나눠 학기제로 운영되는 초록이 학교/열흘동안 걸으면서 우리 땅의 소중함을 느끼는 녹색순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줄이고, 건강하고 자립 가능한 도시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삶 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마을 만들기 활동/순환형 지역사회 만들기 활동/환경친화적인 도시재개발 활동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 체계를 극복하고 재생 가능한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핵발전소 반대 운동/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운동/에너지 절약 운동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생명운리를 위협하는 유전자조작을 반대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전자조작식품(GMO)반대운동/ 환경호르몬 대응활동/생명복제 반대활동/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아이들을 위협하는 식품첨가물 대응 활동/유기농산물 확산 활동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같은 대량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노력합니다.

미군 군기지 환경조사와 환경문제 대응/두만강 환경보존 활동/비무장지대 환경보존 활동

환경문제로 생기는 인권침해를 막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소송센터 운영/환경민원에 대한 대응/환경피해자 법률 구제 활동/공익환경소송 활동

www.greenkorea.org

